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
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·회피 의무 체크리스트

< Check List 1 >

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(✓)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

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<input type="checkbox"/>	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·검사·검정·시험·인증·확인, 지정·등록, 등재·인정·증명, 신고·심사, 보호·감호,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·감독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병역판정검사, 징집·소집·동원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개인·법인·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·처분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조세·부담금·과태료·과징금·이행강제금 등의 조사·부과·징수 또는 취소·철회·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금·장려금·출연금·출자금·교부금·기금의 배정·지급·처분·관리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사·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·구매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사건의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·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·교환·사용·수익·점유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의 채용·승진·전보·상별·평가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각급 국립·공립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선정,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, 의안·청원 심사, 국정감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, 국정조사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「건축사법」 및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감리, 「감정평가법」에 따른 감정평가
<input type="checkbox"/>	「형집행법」에 따른 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에 관계되는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「행정기관위원회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
<input type="checkbox"/>	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직무

< Check List 2 >

공직자의 직무관련자(대리인 포함)가 아래에 해당(√)되는 경우 CheckList 3로 진행

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<input type="checkbox"/>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·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·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,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,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
< Check List 3 >

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(√)이 없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

해당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<input type="checkbox"/>	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
<input type="checkbox"/>	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
<input type="checkbox"/>	다른 법령·기준에 제척·기피·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

< Check List 4 >

-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(✓)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·회피 의무 발생
-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의무가 없어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·대표자·관리자·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·법인·단체
<input type="checkbox"/>	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·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·단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
<input type="checkbox"/>	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·국·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 공직자를 법령·기준·사실상 지휘·감독하였던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* 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관위 공직자는 규칙으로 부서의 범위를 별도 규정 가능
<input type="checkbox"/>	법령·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<input type="checkbox"/>	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* 가 있었던 자(친족 제외) * 금융회사,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